

#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연구시론

## -근대일본의 에피스테메(épistémé)<sup>1)</sup>로서의 국체(國體)-

강상규

동경대학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기존질서의 해체는 기왕의 가치기준의 변화를 수반한다. 패전이후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머물러있어야 했던 일본이, 탈냉전적인 신국제질서 체계하에서 자기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동아시아에서 서로 다른 문명권의 충돌이 본격화되어가던 19세기 중반이래 일본에서 줄곧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것일까. 막부말기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일본국체’에 관한 논의를 떼어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일본의 ‘타자(他者)’에 대한 인식이 근대일본의 서구문명관, 아시아관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하면, 국체론은 이러한 인식들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면서도 근대일본의 ‘자기(自己)’인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고는 일본이 서구근대문명을 배척 혹은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했던 국내외적 상황과 당시 일본인들에게 팽배해있던 주관적 위기의식간의 복합적 상호과정<sup>1)</sup>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었는지를 ‘국체’논의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 글이다.

### I. 문제의 제기

인지능력을 지닌 인간은 어떠한 변화의 와중에서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른바 ‘정체성(identity)’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을 이루어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에서도 변화 혹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설정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기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진지하게 자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일본의 자기정체성 혹은 자기설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치열하고 생생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다름아닌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보면 ‘일본인이란 누구인가’, ‘일본의 국가목표란 무엇인가’, ‘일본은 세계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려하는가’하는 일본의 자각적인 물음이란 비단 국제화를 표방한 오늘날의 일본에서 새삼스레 제기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탈냉전의 신국제질서 체계하에서,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탈근대라는 문명사적 지각변동을

1) 어느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제시되는 ‘이성(理性)의 기준’을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부른다. 그리스어로 과학을 뜻하는 에피스테메는 푸코에게 있어서는 시대나 혹은 어느 사회를 고유하게 특징짓는 준거(準據)가 되는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예감하고 있는, 오늘의 일본열도위에서, 이러한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물음이 일본의 현대사에서 진부하리만큼 반복되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sup>2)</sup>.

근대 일본은 문명개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어쩌면 당대의 ‘시대 정신(Zeitgeist)’이라고 판단되는 세계적 대세에 몰입해 들어갔다. 이러한 메이지 일본의 행보와 관련하여 나타나오는,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수행하였던 조선에 대한 일련의 폭력적 개입이나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식’은, 진보와 정체(progress & stagnancy)라는 하나의 단선적인 프리즘을 통해서 비추어 본 동양사(東洋史)라는 ‘인식론적 측면’- 바꿔말하면 ‘멸시와 극복 대상’으로서의 ‘동양의 역사’를 랭케식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구성해간 학문적 작업과정-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진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3)</sup>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국내외의 현실정치라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권력정치의 공간위에서 진행되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本稿는 일본식 근대의 궤적에서 나타난 객관적 위기상황과 주관적 위기의식간의 복잡한 상호과정의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획을 그리면서 진행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무정형하게 보이는 외연(外延)에 내포되어있는 논리의 맥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국체(國體, *Kokutai*)’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려 한 글이다. 그러면 국체란 무엇인가. 우선 일본학자의 말을 들어보자.

“국체라는 단어와 개념만큼, 일본의 근대를 어둡게 옥죄었던 개념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체 개념만큼, 또한 애매모호한 개념은 아마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sup>4)</sup>”

‘국체’라고 하면 한국학계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2) 전후 일본에서 이른바 ‘망언’이 되풀이되는 것이나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치고 일본의 ‘자기인식’ 내지 ‘타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세기 중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일본의 독특한 위기의식, 일본의 근대적 세계관이나 이와 조응하는 중간대개로서의 아시아관, 이러한 세계인식과 대응하는 자기정체성의 모색 등과 관련된 그 핵심적 물음등이, 여태까지 한국학계에서 간과되어온 것은, 아니 적어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되는 지적 공동화(知的 空洞化)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 만큼은 여기에 상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 섭취되어온 근대 학문에 대한 주체적이면서도 성숙한 성찰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後藤總一郎, 『天皇制國家の形成と民衆』(恒文社, 1988: 31); 가와하라 히로시 역시 ‘국체’개념은 근대적 사고로 분석하기 곤란한 개념이라고 지적한 바있다. 河原廣, “治安維持法の推進者たち”, 『社會科學討究』 38호 (1968.8) p.16

‘국체(國體, Staatsform)’라고 하면 주권의 소재, 즉 통치권의 존재상태에 따른 국가의 형태라는 법학적 개념이 떠오를 뿐이다<sup>5)</sup>. 실제로 국체라는 관점에서 근대일본이나 일본사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나 저작은 여지껏 눈에 띄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의외로 일본의 국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전 일본에서 마치 열병처럼 퍼져있던 정치신화로서의 일본의 ‘국체’라는 용어는 패전후 사어(死語)가 되어버리고, 법학적인 용어로서의 ‘국체’라는 개념만이 학문적으로 살아 남아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sup>6)</sup>.

근대일본의 이른바 ‘타자’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논의가 반영된 것이 근대일본의 아시아주의 혹은 아시아인식이라고 말한다면, 국체론은 이러한 아시아 인식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면서도 근대일본의 ‘자기인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체란 당시 일본의 ‘안과 밖’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문맥 안에서 보편적 통합언어(unitary language)로 기능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떼어놓고는 근대일본의 자기정체성의 설정작업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本稿는 메이지이후 일본이 ‘다이쇼데모크라시’와 이른바 ‘쇼오와유신’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아시아의 ‘지도민족’으로서 확신해가는 과정을 지면(紙面)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II. 국체에 관한 담론의 형성

‘국체론’의 기원은 에도시대의 미도학(水戶學)과 국학(國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체론이 실제로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제도안에 정착되는 계기는 메이지헌법의 발표(1889년)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국체론이 보다 일상화하여 대중화된 전기를 이루는 것은 교육칙어의 제정(1890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sup>7)</sup>.

그런데 이처럼 메이지시대에 국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5) 이러한 법학적 차원의 ‘국체’라는 용어가 일본의 국체논의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 Staatsform이라는 독일의 근대법학용어를 ‘국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보급한 인물이 바로 메이지 일본의 대표적인 천황주의 헌법학자이자 국체론자였던 동경제국대학 헌법학 교수인 호즈미야즈카(穂積八束: 1855-1926)이다. 長尾龍一, “法思想における「國體論」” 『日本國家思想史研究』(創文社, 1979: 27); 어떤 언어든지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말을 번역하는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번역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사상적 문제에 대해서는 『日本近代思想體系: 翻譯の思想』(岩波, 1988)을 참조할 만하다.

6) 하지만 ‘형식’으로서의 국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후 일본의 국체가 아직 살아있음을 지적하는 저작으로서의 阿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研究序説』(未來社, 1973; 1995) 등을 들 수 있다.

7) 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新曜社, 1995: 50); 後藤總一郎, 『天皇制國家の形成と民衆』(恒文社, 1988: 39).

는 그 전사에 해당하는 막부말기의 상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국체’란 주자학의 정통주의와 신국사상(神國思想)의 일종의 절충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도학에서 신국사상이나 존황사상(尊皇思想)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18세기 후반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거치면서 신화적·신학적 성격을 겸비하게 된다. 이후 국체론은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등에 의해 종교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대중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처럼 국체론은 다신교적인 일본의 종교적 풍토에서 수많은 신앙중의 하나였으며, 역사를 통해서 유교 및 불교와 대립하거나 타협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에도시대에는 정통사상이라 할 만한 명확한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도막부의 지배라고 하는 것도 명목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쇼오군의 직위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도막부의 지배를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체론은 용인될 수 있었다.<sup>8)</sup>

그런데 페리의 내항 이후 대외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혀 이른바 ‘국가적 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종래의 하나의 신앙에 불과하던 ‘국체론’은 존황양이론이라는 현실정치상의 원리로서 등장하게 된다.<sup>9)</sup> 이때 국체론의 대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론(神國論)은 양이론(攘夷論)이라는 방식으로 막부의 개국방침을 부정하는 원리로서 인용되었고, 그 대내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존황사상은 막부의 외교권을 부인하는 근거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막부시대말기의 혼란의 과정에서 국체론의 ‘존황’과 ‘양이’의 논리가 분리되어 존황론은 막부타도(倒幕)와 왕정복고(王政復古)라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sup>10)</sup>

8)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잠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와타나베 히로시는 일본사에 등장하는 용어로서 현재 널리 통용되는 것 중에는 역사인식의 심화를 방해하는 용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예로서 幕府, 朝廷, 天皇, 藩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에도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에도시대말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메이지이후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막부’라는 용어는 황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는 이전의 용례대로 일본사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러한 지적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되어 지적해두고 넘어간다. 渡辺浩,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東京大學, 1997: 1-15).

9) 이 과정에서 존황론자들의 사상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으로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쇼오인은 당시 일본이 겪는 외압에 대해 종래의 막부식의 질서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천황주권의 정치원리와 만민평등의 인식에 기초한 이른바 ‘일군만민사상(一君萬民思想)’의 국체관을 이념화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 했다. 요시다 쇼오인의 국체관념에 대해서는 後藤總一郎, “國體論の形成: その思想史的祖型” 『天皇制國家の形成と民衆』(恒文社, 1988), 尹健次,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探求: 吉田松陰論” 『日本國民論: 近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筑摩書房, 199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일군만민사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의 사상사적 차이를 검토 비교한 原武史, 『直訴と王權: 朝鮮と日本の一君萬民思想史』(朝日新聞社, 1996)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왕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0) 존황론자들의 토쿠가와막부에 대한 인식은 에도시대말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긍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 논거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통치위임론(統治委任論)’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왕정복고’는 토쿠가와막부의 실정을 이유로 한 위임의 철회라고 말할 수 있을

반면,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일본열도에 새로 성립한 신정부는 양이론에서 문명개화론으로 이른바 ‘전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명치정부는 존황론과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요소, 환언하면 복고적 성격과 혁신적 성격의 결합체로서 출발했던 것이다.

메이지 국가는 내분의 와중에서 태어나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77년)까지는 내전의 위협속에서 성장했다. 이후로도 메이지정부와 반번벌(反藩閥) 세력간의 권력투쟁은 의회를 무대로 계속되었다. 이 무렵 국채론은 주로 번벌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정상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국채의 내용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이데올로기로 평가받는 인물이 가토오 히로유키(加藤弘之)와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이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공리주의 사상이나 자연권 사상과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합리적인 개인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에 유익한 지속적 가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권의 신장이 국력과 반드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11)</sup> 교육칙어는 이러한 논의들이 재구성되어 결정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교육칙어<sup>12)</sup>는 ‘후덕한 황조(皇祖)께서 나라를 세우셨으므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이것이 일본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이니 이를 교육의 연원으로 삼는다, 따라서 신민은 유교적 제가치를 체현하는 데 힘쓰며 국헌을 중시하고 나라 사랑하기에 전력을 다하여 영원무궁한 황실과 조상의 뜻을 빛나게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신도위에 유교적 윤리가 결합하고 그 위에 근대 국민국가의 외피가 씌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칙어가 국민학교 6년간의 의무교육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일본인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반사를 심어놓았으며 또한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일본인 자신의 도덕상, 정치상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생활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조립, 변형되어 사용되었다는 점, 이후 일본의 국체에 관한 출판물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 갔다는 사실 등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3)</sup>

것이다.

11) 가토오와 니시무라에 대해서는 테츠오 나지타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Tetsuo Najita, *Japa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Modern Japanese Politics*. (Chicago University Press., 1974) ch.4

12) 로버트 벨라는 교육칙어 속에 나와있는 ‘국체’라는 말의 사용과 메이지 헌법 1조의 천황의 가계를 만세일계(萬世一系)라고 선언한 것 이상으로 일본인의 배타주의적 성격이 명쾌하게 드러난 표현은 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Robert N. Bellah, “Japan’s Cultural Ident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XXIV(August, 1965: 575).

13) 마리우스 젠슨은 이와 관련하여 ‘국체를 논하는 저서가 처음에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지만 이윽고 홍수처럼 넘쳐흐르고 마침내는 도서관의 큰 분류항목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arius B. Jansen,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s Modernization” in Marius B.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s 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정명환 역, 『日本の近代화와 知識人』(교학연구사, 1980: 60).

근대 일본사회의 독특하고 고유한 본질이 국체라면 이 국체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 요소는 역시 천황제이다. 메이지 헌법을 구상했던 이토오는 헌법을 제정하는 기본정신을 밝히는 글에서 메이지 일본 정치의 축이 천황과 황실의 절대화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14)</sup> 천황의 절대적 권위는 부인하기 어려운 조상의 권위를 빌어 성립한 것으로 시간의 축과 맞물려 있어서 감히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메이지 헌법이 선포되고 교육칙어가 발표될 무렵부터 무의식중에 천황의 권위와 가치체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주입받도록 교육받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면적인 행위는 법률을 통해 규제받고, 내면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칙어에 따를 것이 요구되었다.<sup>15)</sup> 초·중 등 교육 제도와 징병제는 국민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유도, 교화시켜 나갔으며 만일 여기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개인에게는 불경죄, 대역죄, 치안경찰법과 같은 이름의 ‘감시와 처벌(surveillance & punishment)’ 체계가 적용되었다.

결국 교육칙어 안에 구현된 국체의 의미를 재구성해보면 “국체란 신성한 기원을 지닌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체제’와 유교적 가치체계의 체현으로서의 ‘가족적 인간관계’, 그리고 불가사의한 통일체적 존재이자 충성과 헌신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라는 세계의 축으로 구성된 일본사회의 고유하고 독특한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체’란 한번 정해지면 자신의 모습을 고정시켜놓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존재태(being)라기보다는 이데올로그들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생성태(becoming)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concept)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담론체계(discourse)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역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칙어가 제정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국정 수신교과서를 살펴보면, 제1기 교과서(1904년)에는 주로 전통적 가족관계, 천황가계의 중요성, 나라 창설의 기초 및 국체자체를 강조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던 반면, 제2기 교과서(1910년)에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이며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거국적으로 일대가족을 이루는 것으로서 황실은 우리들의 종가(宗家)이다. 우리들 국민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애의 정으로써 만세일계의 황위를 공경한다. 이로써 충효는 하나이며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 충효의 일치는 실로 우리 국체의 특징이다.”<sup>16)</sup>

14) 『伊藤博文傳』中卷, <22編: 帝國憲法の制定>中 5章: 帝國憲法の發布 p.651-656.

15) 메이지헌법과 교육칙어의 제정은 근대일본제국의 근본을 구성하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츠모토 산노스케는 ‘메이지국가의 성립이후 20년 이상의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 메이지 헌법의 제정이 천황제 국가의 정치권력의 장치 혹은 제도의 채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에 잇따른 교육칙어의 발표는 국민도덕의 근본을 제시함으로써 천황제국가를 일상적인 생활공동체(Lebens gemeinschaft)를 지향한 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松本三之介, 『明治思想における傳統と近代』(東京大學, 1996: 40-41).

16) 국정 수신 교과서의 내용은 石田雄, “이데올로기로서의 天皇制,” 차기벽, 박충석편, 『日本現代史의 構造』(한길사, 1980: 112-113)에서 재인용.

여기에 이르면 교육칙어의 논리에 나오는 국체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시켜 놓은 정도를 미묘하면서도 분명히 넘어서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체란 보다 분명하게 ‘천황제를 모태로 하는 가족국가 체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며 보다 억압적 성격을 확고히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체론이 교육칙어에 채용된 이후 일본인들에게 이른바 ‘일본주의’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서 국체론의 행방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치무라 칸조(内村鑑三)와 같은 기독교도들이나 인류학과 같은 과학적 방법론을 표방한 근대학문들이 국체론자들을 논박하고 나왔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서 국체에 대한 본격적인 반박을 하고 나선 특징적인 인물로 기타잇키(北一輝)를 들 수 있다. 그는 국민들이 메이지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대는 국체론이라는 미신과 망상에 사로잡혀 환영(幻影)을 천황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천황 역시 가장국체(家長國體)라는 신앙위에 올려진 채 실질적으로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국가주권론에 입각하여, 천황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한 것이며 군신일가(君臣一家)를 근거로 충효일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역사발전이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교육칙어로 대표되는 당시의 국체론을 폐기처분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8)</sup>

하지만 국체론자체의 논리모순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위기는 국제적인 일본의 위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이 시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대규모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메이지일본의 숙원이던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함께 대륙진출을 현실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개국이후 줄곧 수세적 위치에 놓여있던 섬나라 일본을 팽창하는 제국 일본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더욱이 ‘한국병합’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부상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의 논쟁 등은 교육칙어 제정 당시의 방어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국체론의 자기변신을 강제하게 되었다<sup>19)</sup>. 왜냐하면 가족국가로서의 일본국가라는 논리와 이민족인 한국을 병합한다는 논리는 공존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여태까지의 국체론이 다민족 제국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체론자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체론자들은 단일순수 혈족국가라는 일본상을 버리고 제국팽창의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변모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체론자들이 혼합민족으로서의 일본의 평화적 동화력과 적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7) 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新曜社, 1995) 3장과 4장

18) 1906년 발표된 기타의 『국체론 및 순정(純正)사회주의』는 당시의 국체에 대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사고를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당시 국체론의 일단을 생생하게 전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그가 후일 전향하여 국가개조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여러모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北一輝, 『國體論 及 純正社會主義』(岩波書店, 1956)참고.

19) 小熊英二, 앞의 책, 제5장: 日鮮同祖論, 제6장: 日韓併合

### III. 메이지 질서의 해이와 위기의식: '막연한 불안'

1889년의 입헌 제도가 자리를 잡은 이래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거쳐 쇼오와에 이르는 역사는 승전의 환호성과 민중들의 자기주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시기로서, 나름대로 치열한 '자각' 과 '모색', 그리고 새로운 '시도' 들이 일본의 국내외 정치공간을 메웠던 시기였다. 특히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간 동안 일본 국내정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체제가 자리잡혀 나갔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대전이후 국제 평화주의가 대외관계의 기본틀로 인식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안에서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 민본주의등의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신디칼리즘, 공산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좌파 계열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질풍노도는 근대 일본 사회의 모순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자각하고 해결하려는 모색 또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만일 근대 일본의 역사를 특이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다이쇼기를 전후한 시기는 가장 정상적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일본사회에 팽배한 위기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위기의식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 시기의 위기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새로이 갖게 된 고민거리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메이지 유신 이래 40여년간 구체적인 현안이 되어 왔던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한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만주지역에서 영토와 이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대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일본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은 일본을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문제들을 잉태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정치적 독립은 육해군과 여러 열강과의 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국가의 경제력이 아시아 국가들의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러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은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아시아주의의 한 형태인 '동양평화론'을 들먹이며 인종간의 전쟁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는 유색인종들에 자신감을 주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백인종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것이었다<sup>20)</sup>.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만주에 배타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영, 미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많은 일본인들은 '미중유의 인종적 전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지 이데올로그들을 비롯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국제관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세계적 동향과 일본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동서문명, 특히 황인종과 백인종의 충돌 여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는

20) 拙稿, 「高宗의 對外觀에 관한 研究」(서울대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83-84), 「高宗의 對外認識과 外交政策」 이기백편 『韓國史市民講座』19집 (일조각, 1996)



생각이 일본 사회에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일본은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 존재하며, 일본의 장래가 동과 서의 공존, 융합에 있다고 하는 믿음은 그 외연상으로는 일본인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바는 일본인들의 당시의 심리적 '불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러일전쟁 이후 불안감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이 불확실한 국제관계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심각하게 대면하게 된 사실을 러일전쟁의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의 충격이라고 한다면, 러일전쟁을 기점으로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2)</sup>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면서부터 메이지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부과된 국민적 독립, 산업화, 대륙진출이라는 과제가 상당부분 성취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메이지 국가 건설을 직접 담당했던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적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로(元老)의 위상이 정치적 지도자에서 조정자로, 권력의 주체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변했고, 육체적 쇠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축시켰다. 원로의 정치적 기능이 달라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될 계층은 기존 정치구조의 바탕이 되고 있던 관료, 군벌, 정당, 재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집단들은 지도체제를 다원화시켰고, 그 결과 집단과 집단간의 경쟁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로의 정치적 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메이지 일본의 지도체제의 다원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길을 텃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 내각의 확립과정이란 관료, 군부, 정당이 서로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정당이 정치권력의 주체로서 정통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국내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정당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하게 대두한 민주주의와 군축, 국제평화로 이어지는 당시의 시대적 조류였다. 이른바 '세계의 대세'라는 말이 당시 일본사회를 풍미하게 되자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인 국내 정치의 전개와 도의적이고 평화적인 국제관계가 세계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에 발맞추어 진행된 의회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기반한 신념이나 대중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당운동은 대중들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나가자 오히려 정치적 부패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25년 보통선거제도의 실시로 유권자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을 평소에 조직화하지 못한 후보자는 부동표로 보이는 대중을 현금으로 매수하려 하였고 따라서 정당은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재벌과 결탁하고 재벌의 온갖 부정을 비호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만연으로 인해, 정당은 의회정치가 구체화될수록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었고, 의회정치의 실현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지식인층, 중산층 그리고 국민대중의 실망과 불신의 증

21) 入江昭, 이성환 역, 『日本の外交』 p.24-27, 32-33 참조

22) 러일전쟁에 관해서는 拙稿, 「러일전쟁: 문헌해제」 김용구/하영선편 『한국의교사』 (나남, 1996)

대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도 바람직한 상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차 대전으로 인해 연합군으로부터의 군수물자와 소비재의 다량주문이 일본으로 쏟아지고, 유럽대륙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대륙에서 '힘의 공백'이 나타나자 일본은 시장을 독점하여 자본의 축적과 중화학공업의 건설, 공장의 대형화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공업성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번영은 종전(終戰)과 더불어 실의와 좌절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심한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 정치적 토양 또한 균질적이지 못했다. 경제도 이중경제였지만 사회 전체도 이중구조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인은 계속 그 지적 시야를 넓히고 시대적 조류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6년간의 의무교육이 전부인 대다수의 국민은 기껏 충성심이나 복종의 정신을 훈련받는 것이 고작이었고, 교육이라는 것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동경의 눈으로 부러워하는 반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정당 정부에 의한 평화지향, 무역중시의 대외정책도 일부 일본인에게는 차별의 사적인 이익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sup>23)</sup> 이러한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이 익사회 관념이 희박한 당시로서 특정집단에 뿌리박은 정당운동이 일본주의, 국가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일본 대중들에게는 대단히 어색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이상적 관념과 산업사회의 차별적, 배타적 논리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정당정치인들의 실질적 타락과 무능이 국민들의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역설적이지만 사상적으로 외래사상의 유입으로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나타나게 되고 기대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가 일본인들로 하여금 미국식의 풍속이나 자유주의적 사상을 '세계의 대세'로서 받아들이게 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러시아 혁명은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기존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들 각자에게 그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난 불안감과 위기의식의 만연은, 지금의 상태로 안되며, 무언가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의 각종 사회운동에서 등장했던 '개조(改造)'라는 용어가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사용되었던 데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팽배한 위기감의 실체를 일본의 문호 아쿠다가와 류우노

23) Edwin O. Reischauer, *The Japane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95-97참조

24) 각종 개조운동에 대해서는 三谷太一郎, 앞의 논문, p.248-265; 金原左門, “‘改造’の時代”, 『昭和の歴史』1. 昭和への胎動(小學館, 1983).

스케(芥川龍之介)의 유언보다 잘 전해주는 말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는 ‘막연한 불안(ほんやり不安)’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살했다. 더욱이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은 당시의 군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군부의 눈에 비친 시대상(像)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사회에서 군부의 지위는 크게 변하였다. 대전후 일본 사회에 팽배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의 무드는 군부의 사회적 지위와 인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메이지 이래 막강했던 군부의 세력이 흔들리면서 군비의 축소를 단행하고 군부의 정치적 특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시베리아 출병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군부가 취한 독자적인 행보는 군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긴축경제의 필요와 맞물리면서 군축이 진전되어 나갔다. 워싱턴체제 이후 실행된 해군의 군축에 뒤이어 육군의 군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육군은 1922년부터 1925년 사이에 군의 합리화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에 걸친 군축을 단행하였다. 이때 군의 합리화와 근대화라는 일종의 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1차대전 이후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군부에 널리 인식되면서 ‘창군 이래 맞이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되었다.

총력전체제를 확립하고 군대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군부에 대한 번벌지배를 타파해야 했는데, 1922년 메이지의 원로이며 조오슈파벌의 총사령관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사망하고, 1924년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육군대신으로 오르게 되면서 점차 조오슈파벌의 육군지배라는 종래의 전통이 무너지게 된다. 이후 우가키는 인물 본위의 인사정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동 대지진 이후의 어려운 예산을 고려하여 대폭적이고 과감한 군축과 군의 기계화에 착수함으로써 정당정치인과 중견장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우가키를 준(準)조오슈파벌로 간주하는 세력들이 우가키를 비난하고 나섰고, 소속부대를 잃은 청년장교들은 이에 동조하여 ‘우가키 국적론(國賊論)’을 폄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군부의 위기감은 일본 군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파벌간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안보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많은 국가적, 문명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정당정치, 특히 당파정치를 해간다는 것이 군부의 눈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치였으며, 국민의 소망과 필요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 장교의 출신성분이 점차 중류계급 혹은 서민층으로 확대되면서 당시 농촌 및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피폐해져 가는 문제의 책임은 정경유착 및 금권정치 같은 재계, 정계, 군벌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년 장교들의 이러한 불만은 「군인척유」(1882년선포)<sup>25)</sup>에 따라 국내개혁에는 군

25) “짐은 너희들 군인의 대원수이니라. 그런즉 짐은 너희를 손발같이 의뢰하고 너희는 짐을

인이 앞장서야 한다는 선민의식과 결부되어, 유사시에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은 자신들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의식과 결합되어 급진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더군다나 1차대전 이후 수차에 걸친 군축이 정당, 재벌, 원로, 군벌 등이 경솔히 세계 풍조를 타고 군부를 희생시켜 가면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따라서 공격의 당면 목표를 이들에게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6)</sup>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면서 저항의 기운이 높아만 갔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배일 이민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군부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어갔다. 결국 이런 위기의식위에서 서양배척의 기운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시데하라 기요로(幣原喜重郎)의 경제적 실리의외교가 굴욕적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 IV. 새로운 통합원리의 모색과 일본 국가 개조론의 부상

천황제로 상징되지만 원로들의 과두지배와 관료엘리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적 질서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국내 정치와 공개 외교 및 평화외교를 기조로 하는 국제관계의 전개가 세계적 대세로서 떠오르면서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맞물려 새로운 사회통합의 원리가 진지하게 모색되었는데, 이는 크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개조라는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운동은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으로 나타났다. 주로 특권을 갖지 않은 산업자본가 계층과 근대적 중산층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 목표를 헌정의 유지 및 정당내각제, 보통선거제의 실현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계몽운동의 선구자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요시노는 대역사건(1910년) 이후 일본 사상계를 뒤덮은 재갈을 걷어내고자 이른바 ‘민본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다. 요시노는 메이지 말기의 민중 시위운동이 내면적 이상과 현실적 정치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게 된 민중이 직접적인 저항의 방식을 선택한데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의 정치의식이 성장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욕구는 보통선거와 책임내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기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머리로 우러러보아야 비로소 그 친함이 깊을 수 있을 것이다. 짐이 나라를 보호하며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고 조상의 은혜에도 보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희들 군인이 맡은 직분을 다하고 못하고에 달렸을 것이다. …… 군인의 본분은 충절을 다함에 있느니라. …… 오로지 자기의 본분인 충절을 지키고 의리는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고 각오할지어다.” 레너드 모즐리, 땡원순역, 『일본천황 히로히토』(김은샘, 1994: 200-202)에 수록된 군인칙유 전문참조.

26) 성황용, 『日本の 民族主義』(明志社, 1986: 86-87).

한편, 법이론의 측면에서 정당내각제를 정당화한 것은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의 이른바 ‘천황기관설’이었다. 미노베의 논리는 다이쇼시대 후기에 이르면 학계 뿐 아니라 정계 및 관계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그의 핵심적인 논점은 한마디로 ‘천황은 국가 통치의 주체가 아니며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속하고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노베의 논리는 국가의 통치권이 천황에게만 속함을 부인하는 것이며 특히 대일본제국헌법 밑에서의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주체인 제국의회가 천황으로부터 독립한 국민의 대표자라는 입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sup>27)</sup>

요시노의 민본주의가 메이지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민주주의적 이론과 계몽된 사회여론에 부응하도록 개혁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했던 반면, 미노베의 헌법이론은 통치권 행사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관료 엘리트에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요시노의 저술이 1910년대 후반에서 20년대의 비판적 지식인들을 선도해나간 반면 미노베의 저작은 의욕적인 관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된 개인의 도덕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실천적인 처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일련의 지식인들은 사회의 근본적 성격과 구조라는 객관적인 세계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인 탈출구로서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이었으며,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도덕적 분노를 과학적 혹은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르크스 이론이 일본 역사의 체계적인 연구에 깊이 응용되면서 생산력의 증가와 사회계급간의 상호관계, 역사 속에서 풍요와 빈곤의 대조적 모순의 현실이 변증법적으로 설명되었고 일본의 근대성은 철저하게 부정되어졌다<sup>28)</sup>.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전략 등을 둘러싸고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와 후쿠모토 가츠오(福本和夫)를 양축으로 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일본 근대사에 대한 해석 등을 둘러싸고 다수파인 강좌파(講座派)와 소수파인 노농파(勞農派)로 나뉘어지기도 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은 1920년대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하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 이들 대다수는 논쟁적이긴 했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현실적 혹은 구체적 성격을 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본주의적 입장이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쇼오와시기들어 현실정치로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이탈되어갔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필자가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대세’를 강조하는 상황주의적 경향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와 아울러 천황제를 모태로 하는 가족국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의 결여,

27) 차기벽, “大正期の 社會問題와 社會運動”, 『國權論과 民權論』 (한길사, 1981)

28) Tetsuo Najita, 앞의 책, p.157-163

지도세력의 분열과 정치력의 한계, 그리고 국민들의 열악한 정치적 수준 등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일본정부의 회유와 탄압정책이 정치적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나 일본의 보수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민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같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 통합원리의 모색이란 그 자체가 지금까지 근대 일본을 지탱해오던 사상이나 도덕, 체제를 파괴하는 ‘국체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데모크라시운동의 주요한 이슈였던 ‘보통선거법안’이 마침내 법률로 채택된 1925년 봄, 정치활동의 제한을 공식화하려는 ‘치안유지법안’ 또한 법률로 제정된다. 더욱이 치안유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법을 혼란케하는’ 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 대신에, ‘국체를 변혁하려는’ 과 같은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체의 법학적 의미와 일본식의 고도의 정서적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국체란 ‘일본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되어 광범위하게 남용될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국체의 변혁’에 대해 보다 자의적인 의미로 확대해석되며 이른바 ‘사상범죄’의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운용상’의 문제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간다.

1928년을 계기로 문부성 역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교육규제 강화방침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국체관념 함양’이라는 제목으로 관보에 실렸는데 그 내용이란 ‘모든 수입사상은 완전히 일본화되어야 하며, 이상한 사상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국체를 견고히 지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학생 생도들이 이상한 사상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며, 마음을 기울여 우리 건국의 본래의 의미를 체득시켜 국체관념을 분명히 하도록 하자’고 되어 있었다.<sup>29)</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법성은 형벌과 엄격한 규제법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과도하게 가혹한 치안유지법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형벌 대신에 ‘사상개조’, 실행 대신에 ‘형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여 대다수의 사상범을 보석하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렇듯 열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 같은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던 진보적인 지식층은 입헌정치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입헌정치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힘을 북돋아 주지 못한 채 지적 충족과 헌신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와중에서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실천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또 다른 비판의 소리가 높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개조론’에 입각한 체제 비판이었다.<sup>30)</sup> 1차 대전이후 싹트기 시

29) 北一夫, 『日本共産黨始末記』 p.47-50, 54; Richard H. Mitchell, 앞의 책, p.109에서 재인용

30) Tetsuo Najita, 앞의 책, p.164

작하여 1930년대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국가개조론과 이후 쇼오와유신 운동사에 걸친 주요 인물들 중에서 사상적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기타 잇키와 오오카와 슈우메이(大川周明)이다.

앞서 언급한 바있는 기타 잇키는 1906년 『국체론 및 순정사회주의』를 집필한 후 중국의 혁명운동에 가담하여 이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군대와 결탁만이 혁명을 보증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토착적 민족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혁명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919년 상하이에서 기타는 자신의 사상을 종합하여 『국가개조안원리대강(國家改造案原理大綱)』을 집필하여 혁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sup>31)</sup> 기타는 전쟁을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혁명적 사명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건설과 세계 건설이라고 믿고 있었다. 『대강』에서 기타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계급투쟁의 정당성의 논리를 빌어 국가간의 투쟁을 정당화하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제적 무산자’인 일본의 국내외적인 개조작업이 시대적 사명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오오카와 슈우메이 사상의 중심은 한마디로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국수적 일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힘과 투쟁에 바탕을 둔 오오카와의 사관에 의하면 ‘만물은 항상 투쟁하고’ 세계사는 ‘동서의 대립과 항쟁, 통일’의 역사였다. 그의 결론은 동양문명의 대표인 일본이 서양문명의 대표인 미국과 필연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세계문명의 과도기적 단계를 끝내고 동서문명의 통합과 세계통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오오카와의 눈에 비친 당시 일본의 현상은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서양송배의 풍조로 말미암아 국민은 ‘민족적 자존’을 잃어버렸고, 지도계급은 ‘세계 최고의 정신인 일본정신의 혼(大和魂)’을 상실함으로써 ‘일본의 위엄’은 날로 쇠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결국은 정치가들이 일본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정신을 재현시키고 국가적 위엄을 드높일 수 있는 ‘제2의 유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sup>33)</sup>

31) 『대강』은 쇼오와유신의 이론적 근거이자, 개조론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쿠데타의 경전이였다. 서론과 결론, 그리고 8개의 장으로 구성된 『대강』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개조를 설명하는 부분과 일본의 국가적 사명을 밝히는 부분으로 되어있다. 北一輝, “日本改造法案大綱”, 今井清一, 高橋正衛 編, 『現代史資料 5: 國家主義運動 2』(東京: みすず書房, 1982년판); 마루야마 마사오는 기타 잇키가 일본 파시즘의 교조이며, 『대강』은 쇼오와 시대 초국가주의운동의 ‘나의 투쟁(Mein Kampf)’과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상일, 『日本の 國家主義: 昭和維新과 國家改造運動』(까지, 1988: 96, 106); 丸山眞男, 『現代日本政治の思想と行動』(東京: 未來社, 1956: 34).

32) 大川周明, 『日本乃日本人の道』(東京: 行地社出版部, 1926) 을 참고

33) 大川周明, “日本的言行”, (東京: 行地社出版部, 1930)를 참고

기타와 오오카와가 품고 있었던 사상은 일본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면서, ‘계급’을 ‘국가’로 치환시켜 놓은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일본의 전통적 신앙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오오카와가 일본 고유의 신화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면 기타는 일본 불교인 법화종(法華宗)에 심취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행동하는 것’이란 궁극적으로는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는 일종의 신앙적인 문제였으며, 현실정치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헌신이라는 명분에서 몸을 던지는 것을 초월적이고 예언자적인 행위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들은 기존의 강력한 체제나 강한 적에 저항하거나 도전할 때 개인의 극한적인 희생에 주로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두 사람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본의 국체에 근거하여 ‘국민의 천황’이 중심이 된 일본의 통합원리가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국가개조’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상 및 ‘서양문명’의 축출의 필요성에 대한 사상적 근거를 모두 담고 있어, 이른바 ‘일본주의’와 아시아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대동아공영권’의 원형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의 ‘사상’은 당시 일본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군부의 청년장교 및 혁신세력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이후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전화(轉化)’될 순간만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V. 메이지 논리의昭和에의 着床: 「國本의 本義」완성

1920년대 말기에 불어 닥친 ‘세계공황’은 일본 국내외의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공황은 각국이 자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국익 우선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자국중심의 현실주의적 기운이 ‘세계의 대세’로 자리잡게 한 반면, 공존공영이나 세계평화와 같은 이상주의적 노력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연출시켜 놓았다. 또한 국내적 측면에서 공황의 여파가 자본주의적 기반이 약한 일본경제, 특히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농업부문과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 만성적 불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는 공황으로 인해 나타난 무역부진, 긴축재정, 물가하락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으며 재벌의 산업지배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 하면 농촌경제를 받들고 있던 2대 지주인 쌀과 누에의 가격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농업공황을 유발시켜 놓았다.<sup>34)</sup> 이러한 상황에서 시데하라 외상은 1930년의 런던군축회의에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한다는 의도에서 해군력의 감축을 약속하는 군비축소조약에 조인하고 있었다.

이후 정부와 군인들의 불협화음, 군부내의 파벌대립 등과 관련하여 민간 국가개조론자들과 혁신계 군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쇼오와유신운동의 불꽃이 일본열도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을 피로 물들이게 되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sup>35)</sup> ‘권

34) 遠山茂樹, 今井清一, 藤原彰, 앞의 책, p.59-66; 丸山眞男, “日本과시즘의 思想과 運動”, 『日本現代史의 構造』(한길사, 1980: 282-294).



력의 소개'의 전환이라는 현실정치적 차원에서 쇼오와유신운동의 정점을 이룬 것이 1936년에 일어난 2·26사건이라면, 일본인들의 의식의 전환 곧 사상적 차원에서 유신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건은 이른바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체명징운동이란 미노베 타츠키치의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면서 전개된 일련의 운동으로서 일본 열도 전역을 달아오르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국체명징운동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주도했던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동향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정부는 2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사상개조작업에 착수하면서 전향(轉向, conversion)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담당한 검찰당국은 기왕의 검거, 처벌이라는 방법과 전향이라는 방식을 함께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전향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은 당시 일본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였던 사노 마나부(佐野學)와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의 공동전향성명이 있었던 1933년 5월말 이후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5월성명'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천황제 폐지, 식민지화된 제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자치권의 필요성, 그리고 만주사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비에트 러시아의 속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천황'과 천황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가치'를 깨달아 천황의 지도하에 활동하는 일국사회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6)</sup> 이들의 전향은 국익우선주의와 현실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이른바 '세계의 대세'와, 국내 개조론자들에 의해 주도된 일본주의의 교양이라고 하는 '객관적 정세'의 악화에 직면한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전향은 일본의 진보적 세력들에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일본 사상계의 시대적 대세를 이루게 된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 배격운동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1935년 1월말 국체옹호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된 미노베를 비판하는 장문의 성명서가 원로, 중신, 군인, 재향군인, 교육자, 국가주의 단체와 같은 일본의 각계에 전달되면서부터였다. 이 성명서의 반향은 우익단체를 기점으로 하여 제국의회, 군부 및 정부 등으로 확산되어갔다. 자신의 학설에 가해진 일련의 공격에 대해 미노베는 귀족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sup>37)</sup> 오히려 그의 연설은 우익단체와 군부를 자극하게 되어 정치적 문제로 파문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났다. 미노베의 연설을 계기로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전국에서 별폐처럼 일어서 천황기관설 배격운동에 참여하였고, 개별적인 운동을 보다 강력한 국민적 운

35) 쇼오와유신과 국가개조운동에 대해서는 한상일, 『日本の 國家主義: 昭和維新과 國家改造運動』(까치, 1988)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있다.

36) Richard H. Mitchell, 앞의 책, p.135-137.

37) 미노베의 연설문은 今井清一, 高橋正衛 編, 『現代史資料 4: 國家主義運動 1』 p.361-368에 전문이 수록됨; 그의 연설은 박수가 허락되지 않는 귀족원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게 할 만큼 좌중을 압도하는 연설이었으며, 신문으로부터도 미노베 박사의 학자적 양심의 발현이라고 격찬을 받았다.

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관설박멸동맹」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해 채택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위로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들어, 만민이 그의 다스림을 앙망(仰望)하여 영원무궁케 하는 것이 우리 국체의 본래 의미(國體の本義)이다. 천황기관설은 서양의 민주사상으로써 우리 신성한 흥정헌법을 곡해하며 국체의 본래 의미를 교란하는 것으로 불순하여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악한 학설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국민정신을 진흥할 것인가? 우리는 이에 국체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밝혀(明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약하여 이 흉악한 학설의 박멸을 기약한다.

이로써 정당정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 천황기관설은 역설적으로 정당의 주도하에 정치적으로 부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정당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장사지내게 되었던 것이다.<sup>38)</sup> 또한 육군은 「대일본제국 헌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군부의 기관설 비판과 배격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관동군에서도 국체명징에 관한 훈시가 별도로 내려졌다. 처음에는 기관설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정부는 우익단체, 의회 및 정당, 군부 등에서 국체명징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어가자 결국 압력에 굴복하여 국체명징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쇼오와유신운동의 사상적 정점이라할 수 있는 국체명징운동은 이러한 정부의 성명과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계기로 하여 휴지기(休止期)에 들어가게 된다.<sup>39)</sup>

이렇게 하여 마침내 일본 국민의 정신무장을 위하여 일본의 국체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밝힌 『국체의 본의』가 1937년 3월 문부성에 의해 정식 발간되어 배포되었다.<sup>40)</sup>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일본의 독특한 국체는 ‘신성한 기원을 지닌 만세일계의 천황제를 모태로 하는 가족국가’이기 때문에 충과 효는 완전히 일치하는 가치체계를 뿐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일본 역사의 전통에는 진정한 의미의 ‘조화’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일본의 ‘상무정신(尙武精神)’하에서는 평화와 창조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것,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전쟁’도 파괴와 지배를 위해서가 아닌 대화(大和)와 평화, 창조를 위한 것이 되며, 이 안에서 사는 개인은 순수하고 사심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사로움을 없애 근본적이고 참된 대아(大我)를 위해 스스로를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의 요지이다. 따라서 국체를 분명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문화를 채택하고 승화시켜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 『본의』의 결론이었다.

『본의』의 선포를 통해 일본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공식화된 것은 물론, 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서양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학설에서 벗어나 모든 논리를 일본주의적

38) 遠山茂樹, 今井清一, 藤原彰, 앞의 책, p.118

39) 今井清一, 高橋正衛 編, 『現代史資料 4: 國家主義運動 1』을 참조.

40) 『본의』는 <서론>, <충과 애국>, <효>, <충과 효의 일치>, <조화>, <상무정신>, <자아의 소멸과 동화>, <무사도>, <결론>, <우리의 사명>이라는 1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는가 하면 심지어 서양에서 유래한 종교마저 일본화하려는 종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sup>41)</sup> 이렇게 하여 국체명징운동, 2·26사건 등으로 체제안에 흡수된 쇼오와유신운동의 혁명적 감성은 정부 주도하에 팽창주의적 ‘아시아 해방의 꿈’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처럼 일본은 “개인이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고 고독한 저항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줄달음질치고 있었던 것이다.<sup>42)</sup>

## VI. 결론에 대신하여

근대 일본은 천황제 시스템을 떠나서 이해하기 어렵다. 마루야마등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체제의 상징이었던 천황제도는 근대 일본 정치를 ‘무책임의 체계’이자 ‘억압이양의 체계’로 만들어 놓았다.<sup>43)</sup> 그러나 천황제라는 형이상학적 존재가 현실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개개인 하나 하나를 추동하는 구체적 존재로서의 천황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황제가 체현되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실체로서의 가족국가(家族國家) 일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일본국체’의 설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정된 국체가 2차대전으로 차단된 일본인들의 모든 가치 기준의 원천이자 구체적인 행동의 준거(準據)의 틀, 푸코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에피스테메(épistémé)로서 활용되었음은 지금까지 간략히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국체라는 필터를 통해 유입된 서구적 근대성이 근대 일본의 사상체계에 남겨놓은 문제는 너무나 크고 많아서 필자가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서구의 근대성, 합리성의 요소가 일본문화, 일본적인 가치체계라는 신화적 요소와 즉자적으로 결합하면서 두 가지가 모두 왜곡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서양에서 이루어진 근원적인 회의와 모색 그리고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일본의 지식인을 비롯한 학생,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기는 하였으며 그에 대한 천착과 이에 근거한 전망을 이루어 내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원리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의 결여<sup>44)</sup>는 ‘되어가는 형편’에 따른 상황추수적 자세를 일반화시켰을 뿐 아니라, 행위의 가치 기준을 ‘국체’라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에만 매달리게 만들었으므로, 일본적 특수성의 틀 안에 모든 세

41) 今井清一, 高橋正衛 編, 『現代史資料 4: 國家主義運動 1』 p.441-450

42) Marius B. Jansen, 앞의 논문, p.59

43) 이에 대해서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未來社, 1957), 특히 “超國家主義の論理と心理”를 참고할 것.

44)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일본인들에게 나타나는 원리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나 천착의 결여에 대해서 일본의 이중성(Japan's duality) 혹은 일본의 애매모호성(Japan's ambiguity)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러한 보편성의 결여는 전후에도 줄곧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e Kenzaburo, "Japan's Dual Identity: A Writer's Dilemma", in Masao Miyoshi and H.D. Harootunian eds., *Postmodernism and Japan* (Duke, 1989).

계를 억지로라도 담아내려는 작위적이고 현상파괴적 인식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상황에 따른 자기 모색의 방식에 상대적으로 구애받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적인 것, 일본의 고유한 가치체계로 회귀하는 모습을 가능케 했던 인식론적 근거가 되었는데 다만 이러한 자기행위에 따르는 수사(rhetoric)만큼은 거창하고 화려하면서도 그만큼 추상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서양의 국제법 체계 혹은 만국공법적 세계질서 속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속성을 간파하는 데는 의미있는 현실주의적 방식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결국 ‘개인’과 ‘세계’에 대한 다원적 존재 가치와 아울러 대등성에 대한 진지한 자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체험을 넘어 무한경쟁의 토양위에 공존공영(共存共榮)의 21세기 문명을 모색하려는 이들 모두가 진지하게 반추하지 않으면 안될 동아시아 근대문명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강상규. 1995. 「고종의 대외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_\_\_\_\_. 1996. 「러일전쟁: 문헌해제」. 김용구/하영선 편. 『한국외교사』 나남.  
 \_\_\_\_\_. 1996. 「고종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이기백편. 『한국사시민강좌』 19집. 일조각.  
 레너드 모즐리. 1965. 팽원순 역. 1994 『일본천황 히로히토』 깊은샘.  
 박충석, 차기벽 編. 1980. 『日本現代史의 構造』 한길사.  
 성황용. 1986. 『日本の 民族主義』 명지사.  
 이도형. 1986. 「일본사회의 우경화의 연원과 논리」 『오늘의 일본을 해부한다』 한길사.  
 차기벽. 1978. 「日本の 傳統과 政治的 近代化」 『現代日本の 解剖』 한길사.  
 \_\_\_\_\_. 1981. 「大正期の 社會問題와 社會運動」 현대일본연구회편 『國權論과 民權論』 한길사.  
 \_\_\_\_\_. 1986. 「일본의 진보주의, 그 역사적 성격과 전개」 『오늘의 일본을 해부한다』 한길사.  
 한상일. 1982. 『日本軍國主義의 形成科程』 한길사.  
 \_\_\_\_\_. 1988. 『日本の 國家主義: 昭和維新과 國家改造運動』 까치.  
 현대일본연구회 편. 1981. 『國權論과 民權論』 한길사.  
 古田光. 1968. 「思想史의 課題と日本の 近代」 『近代日本思想史大系I: 近代日本社會思想史 I』 有斐閣.  
 久野收, 鶴見俊輔. 1956. 『現代日本の 思想』 岩波書店. 심원섭 역. 1994. 『일본근대사상사』 문학  
 과지성사.  
 吉田博司. 1987. 「國本の 政治思想」 宮本盛太郎 『近代日本政治思想の座標』 東京: 有斐閣.  
 大川周明. 1926. 『日本乃日本人の道』 東京: 行地出版會.  
 \_\_\_\_\_. 1930. 『日本的 言行』 東京: 行地出版會.

- 藤原彰. 1987. 『日本軍事史』(東洋經濟新報社) 엄수현 역. 1994. 『日本軍事史』時事日本語社.
- 渡辺浩.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東京大學.
- 文部省. 1937. 『國體の本義』日本内閣印刷局.
- 北一輝. 1906, 1960年版. 『國體論 乃 純正社會主義』北一輝 遺著刊行會.
- 小熊英二. 1995. 『日本短一民族神話の起源』東京: 新曜社.
- 小田實. 1969. 「日本の近代化と知識人の變遷」『日本の知識人』(筑摩書房) 鄭明煥 譯. 『日本の近代化와 知識人』교학연구사에 수록.
- 松本三之介. 1996. 『明治思想における傳統と近代』東京大學.
- 阿部博純. 1973, 1995. 『日本ファシズム研究序説』未來社.
- 原武史. 1996. 『直訴と王權: 朝鮮と日本の一君萬民思想史』朝日新聞社.
- 遠山茂樹, 今井清一, 藤原彰. 1983. 『昭和史』東京: 岩波書店.
- 尹健次. 1997. 『日本國民論: 近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筑摩書房.
- 入江昭. 1966. 『日本の外交』中央公論社. 이성환 역. 1993. 『일본의 외교』푸른산.
- 宇安宣邦. 1994. 「日本の近代と近代化論: 戦争と近代日本の知識人」『岩波講座: 現代思想15= 脱西歐の思想』岩波書店.
- 長尾龍一. 1979. 「法思想における'國體論」『日本國家思想史研究』東京: 創文社.
- 川崎庸之, 奈良本辰也 編. 1977. 『日本文化史』2 (有斐閣) 김현숙, 박경희 역. 1994. 『일본문화사』혜안.
- 青木 保. 1990. 『'日本文化論'の変容』中央公論社.
- 春畝公追頌會著. 1940. 『伊藤博文傳』東京: 春畝公追頌會.
- 坂本多加雄. "吉野作造の民本主義: その過去と現在". 『比較の中の近代日本思想』山川出版社, 1996.
- 河原廣. 1968. 「治安維持法の推進者たち」『社會科學討究』38호.
- 鶴見俊輔. 1982. 『戰時期日本の精神史: 1931-1945』東京: 岩波書店. 강정중역. 1982. 『일본제국주의정신사』한벗.
- 現代史資料. 1963. 『國家主義運動』1,2. みすず書房.
- 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 後藤總一郎. 1988. 『天皇制國家の形成と民衆』恒文社.
- Dale, Peter N. 1986. *The Myth of Japanese Uniqueness*. New York: Croom Helm.
- Field, Norma. 1991.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New York: Pantheon Books. 박이엽 역. 1995.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창작과 비평사.
- Gluck, Carol. 1985. *Japan's Modern Myths: Ideology in the Late Meiji Peri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John W. 1970. *Japan: From Prehistory to Modern Time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박영제 역. 1986. 『日本史: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역민사.
- Hall, Robert K., ed. 1949. *Kokutai No Hongi: Cardinal Principles of the National Identity of Japan*. Transl. by John O. Gauntlet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nsen, Marius B. 1965.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s Modernization." in Jansen, Marius B.,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s 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鄭明煥 譯. 『日本の近代화와知識人』 교학연구사.
- Mitchell, Richard H. 1976. *Thought Control in Prewar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운식 역. 1982. 『日帝의 思想統制: 思想轉向과 그 法體系』 一志社.
- Najita, T. and H. Harootunian. 1988.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 Political and Cultural Criticism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The Twentieth Century, edited by Peter Du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jita, Tetsuo. 1974. *Japa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Modern Japanese Politics*. Chicago University Press. 박영재 역. 1992. 『근대일본사: 정치항쟁과 지적긴장』 역민사.
- Oe Kenzaburo. 1989. "Japan's Dual Identity: A Writer's Dilemma." in Masao Miyoshi and H.D. Harootunian eds. *Postmodernism and Japan*. Duke.
- Reischauer, Edwin O. 1977. *The Japane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eren, Karel van. 1989. *The Enigma Japanese Power: People and Politics in a Stateless Nation*. London: Macmillan.

**AN ESSAY ON MODERN JAPANESE IDENTITY  
- KOKUTAI AS AN ÉPISTÈMÉ OF MODERN JAPAN -**

Sang-Gyu Kang

*University of Tokyo,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Ph.D. Candidate*

The termination of an existing order, as a matter of course, is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criteria values. So it is natural that since defeat, Japan, having been forced to stay in an American-centered international order, began agonizing seriously in connection with its own identity under the new world order referred to as post-cold war.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questions concerning what Japan is to be like have been raised frequently throughout the process of its modern state formation since the mid-19th century in the Japanese archipelago.

That granted, what was the process like?

It is hardly possible to understand modern Japan's agony relating to its identity without considering the argument about *Nihon Kokutai*. The perception of the "other" in Japan's modern history was well brought out in its view of Western civilization and its outlook on Asia, while that of the self-consciousness was expressed in the argument concerning *Kokutai*.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arising from the transitional situation in Japan and the subjective crisis-consciousness, focusing on the process of the unfolding of *Kokutai* discourse.

